

11.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발의일자 : 2021년 6월 4일
- 발 의 자 : 이태손 의원, 김대현 의원, 김동식 의원, 김혜정 의원  
배지숙 의원, 송영헌 의원, 윤기배 의원, 이만규 의원  
이시복 의원, 이영애 의원, 전경원 의원
- 회부일자 : 2021년 6월 8일
- 상정일자 : 제28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 
제1차 문화복지위원회(2021년 6월 17일) 수정안 가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이태손 의원)

### □ 제안이유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자폭탄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피해자 대상 요양생활수당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임.

## □ 주요내용

-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(안 제3조)
-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 중 수혜 지원의 내용을 규정함(안 제4조)
- 원자폭탄 피해자의 요양생활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4조의 2)
  - 요양생활수당과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대상 생활보조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

## 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홍병탁)

### □ 주요 검토사항

- 안 제3조는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,
- 안 제4조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중 수혜 지원의 내용을 명시하였으며,
- 안 제4조의 2는 원자폭탄 피해자의 요양생활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  - 요양생활수당과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대상 생활보조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

## □ 검토결과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자폭탄 피해자(기초생활수급자 포함)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임.
- 전국 원자폭탄 피해자의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대구시에 등록된 인원은 296명(14.4%)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임.

### 〈전국 원폭피해자 등록현황〉

(단위 : 명, %)

전국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세종	제주
2,050 (100)	200 (9.8)	456 (22.2)	296 (14.4)	38 (1.9)	5 (0.2)	27 (1.3)	31 (1.5)	2 (0.1)	9 (0.4)
	강원	경기	경남	경북	전남	전북	충남	충북	합천
	11 (0.5)	170 (8.3)	320 (15.6)	116 (5.7)	12 (0.6)	18 (0.9)	17 (0.8)	12 (0.6)	310 (15.1)

※ 출처 : 대한적십자사 특수복지사업소, 2021. 5월말 기준

- 기존의 조례는 내용이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본 개정 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는 ‘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’는 강행규정으로 되어있어 지원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, 지원시책, 시행방법, 홍보 등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짐.
- 현재 부산광역시 등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요양생활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포함하고 있으며, 본 개정조례안 제4조의2에서도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요양생활수당 규정을 두고

있으나 「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」에서 볼 때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사무로 규정된 것으로 보이며, 자치단체는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- 역사적 사건에서 피해를 받은 원자폭탄 피해자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그 필요성이나 정당성은 타당하다 하겠음.
- 다만 요양생활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상황 및 제반여건 등 대구시의 행정·재정적 사정을 감안하고 타 보조단체와의 형평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,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에서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등 시행에 앞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원자폭탄피해자의 자녀,손자녀에 대한 데이터를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?	현재 자료는 없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파악할 예정임.

## 5. 토론요지

- 「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수정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함.

## 6. 수정안 요지

- 「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제3조 제1항에서 “피해자 등의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”를 “피해자 등의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”로 수정하였음.

## 7. 심사결과

- 수정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찬성)

## 8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.

## 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.

## 10. 첨부서류

- 위원회 수정안 : [붙임1]

[붙임1] 위원회 수정안

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

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3조(지원계획의 수립 등) 제1항 “대구광역시장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복지 및 건강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등의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”를 “피해자 등의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”로 수정하였음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일 부 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지원계획의 수립 등) ① <u>대구광역시</u> <u>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은 피해자</u> ----- <u>손자녀(이하</u> <u>“피해자 등” 이라 한다)의</u> ----- ----- <u>피해자 등의 지원계획</u> ----- ----- <u>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u>	제3조(지원계획의 수립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수립·시행할 수 있다.</u>

##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##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피해자”란 「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.
2. “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”란 원자폭탄에 직접 피폭되지 아니하였으나 부·모·조부 또는 조모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**제3조(지원계획의 수립 등)** ① 대구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(이하 “피해자 등”이라 한다)의 복지 및 건강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등의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피해자 등 지원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
2. 피해자 등 지원시책에 따른 시행방법
3. 피해자 등 지원시책의 홍보
4. 피해자 등 지원에 따른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
5.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4조(지원사업)**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피해자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
2. 원자폭탄 피해 교육 및 홍보
3. 피해자 실태조사 및 자료정리
4. 피해자 의료 및 상담지원
5. 피해자 추모 사업
6. 피해자에 대한 수혜 지원

7.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의2(요양생활수당의 지급) ①시장은 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피해자 등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을 대신하여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금액, 지급절차,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5조(보조금 지원) 시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신청)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제7조 (자료협조 요청) ① 시장은 지원계획 등의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8조(보조금 관리)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·감독을 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보조금이 사업목적 외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단체, 관련 기관, 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의 계획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